

플라스틱 오염 해방 가능한가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친다. 주저지 쓰레기 처리장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재활용 코너에는 투명과 불투명 페트병과 비닐 등이 구분되어있고 다양한 플라스틱 용기 등도 별도로 뒤섞여 있다.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발생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렇다. 특히편리의 상징인 플라스틱 제품이 홍수를 이루면서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에 비상한 경각심을 걸었다.

지난 2022년, 유엔환경총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위기'로 지구환경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하에 2024년 말까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은 기후위기, 생물종다양성의 파괴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을 인류가 이겨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설정한 것.

유엔은 이후 178개국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상위원회(INC)'에서 최종 협정안을 합의하도록 위임했다.

그로부터 3년, 지난 2일 부산에서 개최된 마지막 INC-5차 회의가 폐막했다.

일주일 동안 3800명이 참여한 진행된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의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협정안'을 합의하지 못했

다. 내년도 추가 협상하도록 합의했지만 시기나 장소도 정하지 못했다.

치열한 쟁점은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제품과 유해 화학물질 규제 방안 등 이었다. 산유국들과 석유화학 산업체들은 그들이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치열하게 반대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들은 특히 생산량 축소에 반대해 왔다. 사우디 이란 러시아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 이른바 '기후악당' 국가들이 앞다투어 반대했고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산업권을 보유한 플라스틱 생산에 1~2위를 차지한 중국과 미국은 열중쉬어 자세로 일관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220명의 로비스트를 파견해서 국가들의 압박했다. 그들은 유엔의 기후변화 회의에서도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나 '화석연료 퇴출' 같은 이슈를 맹렬히 반대해 왔다.

세계적으로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5억톤(2022년), 지난 30년 동안 4배 증가했고 현재의 추세가 간다면 2050년이 2배 이상인 10억톤이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종 쓰레기가 된 플라스틱은 9%만이 재활용되고, 매립 50%와 소각 19% 그리고 나머지 22%는 자연에 버려진다.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연간 1300만 톤 어마어마한 양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지구가 질식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플라스틱이 단순히 쓰레기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은 99% 화석연료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을 파괴하며 급기야

는 인간의 건강한 웰빙에 치명상을 끼친다.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정에도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의 해저에서 검출되고 있고 사람의 장기인 뇌와 혈액, 심장에서 심지어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태반과 모유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각종 플라스틱 제품은 수천 가지 화학물질과의 배합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데 그중에는 치명적인 내분비교란(환경호르몬)물질과 영구 화학물질은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 치명적이다.

국제플라스틱 협정이 절실하다. 국내외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해야 한다. 목욕탕에 물난리가 났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면 된다.

다음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불필요한 1회용 플라스틱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플라스틱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대책을 가져야 하고 치명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강이나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지만 국내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와 인류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내년 2025년,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을 위한 원년이 되기를 염원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39대)이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100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다양한 평화·인권 활동으로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으며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사진은 카터 전 대통령이 1997년 6월 '사랑의 집 짓기' 봉사 활동을 펼치는 모습. AP/뉴시스



서석대



2024년이 저문다. 올해 필자가 처음으로 쓴 서석대는 지난 1월9일자 '어느 정치학 교수와의 사담'이었다.

조선대학교 공진성 교수와의 개인적 자리에서 나온 주제 '우리 시대의 미션(시대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참으로 무겁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의 무엇이며, 나아가 대표성을 지닌 민중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시대적 미션을 해결하면서 시대정신을 고취해왔고,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해 발전해 왔다.

왜 2024년 벽두에 '시대정신'을 이야기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근원에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정신적 줄기과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자리했었을 법하다.

하나 시간이 흘러 12월이 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획책하자, 가장 먼저 거리로 뛰쳐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었다. 장갑차 앞에 온몸으로 맞선 것도, 총을 들이민채 국회로 진입하려던 특수부대를 막은 것도, 이를 유튜브에 알리고 호소하는 것도 국민들이 반발 빨랐다.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100만명의 시민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바꿨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정신

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굳건한 민주주의의 수호'다. 좀 더 자세하게는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다. 이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내란에 맞섰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지금도 부릅 뜬 눈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보다 확실하고 더한 시대정신이 어디있는가. 선배 국민들이 피흘려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는 것,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용납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다사다난했다. 이 말이 이처럼 어울리는 해가 또 있을까 싶은 정도다. 한해가 저물어 감에도 여전히 내란 문제는 진행 중이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대통령도 복귀를 꿈꾸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에 동참할수 있어 감사했고, 그 수많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지켜낸 것이 소중하고도 소중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맙다.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도 전남일보 독자로서 법기를 바라며,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2024년 감사했습니다.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2024년 감사했습니다

지역민 관심으로 유가족에 용기 안겨야

광주·전남 등 전국서 추모 물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정치권과 자치단체, 경제계 등에서는 연말연시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애도에 동참하고 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보듬는 사회적 관심이 그나마 위안이다.

30일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2025년 1월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계획했던 20여 건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광주시는 31일 제야의 종타종식과 내년 1월1일 무등산 해돋이 행사를 취소했고, 각 자치구에서도 시무식과 해돋이 행사를 취소했다. 전남에서는 5개 시·군의 해넘이 행사와 7개 시·군의 해맞이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오는 1월 3일 공동개최할 계

획이던 '2025년 광주·전남 경제계 신년인사회'도 전격 취소됐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다. 평생 농사만 짓다가 동네 주민들과 여행을 떠났던 이들에게 아빠와 엄마랑 첫 해외여행을 갔다 돌아오지 못한 아이까지 피해자도 대부분 평범한 이웃이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어린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 연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관광을 떠났을 이들의 정천벽력 같은 사고가 믿겨지지 않는다. 계엄과 탄핵 등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참사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유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지역민의 관심은 유가족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 유가족의 절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의 반성도 중요하다. 어쩌면 정치의 실종이 가져온 이번 참사에 대해 정치권은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불법현수막 철거, 무관용 원칙 지속되길

광주시 제로화사업 결실

단체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까지 관용 없이 철거하는 광주지역 지자체의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시·구 합동정비반을 운영했다. 합동정비반은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유동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관리했으며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실시간 현장 방문해 채증 후 정비했다. 또 광고대행사가 아닌 사업주체(시행사·건설사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1월~11월 기준 불법 현수막은 지난해 같은 기간 77만 7209건에 비해 82% 감소했다.

정당 현수막 또한 예외 없이 정비한다. 지난해 396건을 정비했으나 올해

1월 옥외광고물 법 개정 이후 1071건으로 약 3배 가량 늘었다.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으며, 도로변 등에 설치된 분양 광고 등 상업용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정당 현수막도 설치 기간이 15일 경과,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현수막 높이 2.5m 미만 게시할 땐 철거 대상이다. 그동안 거리를 가득 채운 불법 현수막은 골칫거리였고, 가장 많은 민원 대상이었다.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다 보니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은 한계가 컸다.

과태료 대상 확대와 과감한 정비반 운영 확대로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은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그렇다고 성공은 아니다. 여전히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나부긴다.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단 한개도 불법 현수막을 거는 일에 발을 못 붙이도록 사업이 더 확대되길 기원한다. 광주 도심에 불법 현수막이 사라진다면 민선 8기 광주시가 꿈꾸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도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